

민주연구원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5월 13일(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미중 전략 경쟁은 무역전쟁에서 반도체와 AI 등 범용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경제안보 복합경쟁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지정학과 지경학을 넘어 기술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경학(Tech Economics)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조치와 중국의 대응전략 등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 이번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주요 격전지인 AI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첫째, 미중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은 첨단기술이 연계된 경제안보전략의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며, 대외 경제안보 위협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안보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미국 주도 첨단기술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실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주도 공급망 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조 허브(Foundry Hub)’로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중국 공장 고도화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변화로 2030년까지 중국산 원자재 비율 50% 미만 목표를 달성하고, 원자재·소재·장비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 넷째, 수출통제 등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중 양국의 수출통제에 대응해 반도체·AI 전략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법률 및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경제안보 위협으로 피해 입은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민관 협업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다섯째, 반도체·AI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기술 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분야 톱티어 G3 진입을 위해 HBM 부분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의 우리나라 점유율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GPU와 전력·용수 등 AI 인프라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
- 여섯째, AI·반도체 분야 융합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인재 처우 개선 및 ‘산학연 공동 연구센터’ 등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일곱째, 글로벌 기술표준 형성 과정에서 ‘대안적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고, AI 중견국과의 협력을 통해 AI 거버넌스·데이터 규제 등 ‘한국형 표준’을 국제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민주연구원 김은옥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자 첨단 제조업 강국인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인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